

# 이탈리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2. 8.

I. 일반개황 .....	1
II. 경제동향 .....	2
III. 정치·사회동향 .....	4
IV. 국제신인도 .....	7
V. 종합의견 .....	10

## I. 일반개황

면적	301천 km <sup>2</sup>	G D P	21,956억 달러
인구	60.10백만명	1 인 당 GDP	36,532달러
정치체제	공화국(내각책임제)	통화단위	Euro (EUR)
대외정책	EU 역내 우호관계 유지 중점	환율(달러당)	0.72

- 이탈리아는 유럽 중남부에 위치한 국가로 프랑스, 스위스, 오스트리아, 슬로베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.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약 1.5배에 해당하며 약 6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.
- 이탈리아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경제성장률이 정체되었으며 글로벌 금융 위기로 경제성장률이 2008년과 2009년에 -1.2%와 -5.5%로 급격히 하락하였고, 유럽 재정위기 확대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음.
- 2011년 11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퇴진하고 몬티 내각이 출범한 이후 재정 개혁과 성장 회복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.
- 이탈리아는 NATO(북대서양조약기구)와 EEC(유럽경제공동체) 창립멤버이며, 1999년 EMU(경제통화동맹)에 가입함.

## II. 경제동향

### 1. 경제 구조 및 정책

#### 가. 구조적 취약성

- 정부채무 규모, GDP 대비 120%에 달해 경제운용의 장애요인으로 부각
  - 이탈리아 정부채무는 사회보장성 지출 등으로 GDP 대비 120%(약 2조 유로)에 달하며 EU 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.
  - GDP 대비 정부채무 추이: 105.7%(2008)→116.0%(2009)→118.6%(2010)→120.1%(2011)
  - 과도한 정부채무 문제는 단기간내 개선이 어려워 외부 불안요인이 부각될 경우 경제위기가 전이될 위험이 있음.
- 금융부문의 유동성 부족현상이 지속되어 은행 부실화 우려
  - 이탈리아 은행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를 거치며 경기침체 지속에 따라 기업대출 등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유동성 부족과 수익성 악화 현상을 겪고 있음. 이에 따라 이탈리아 은행들은 2012년 6월 2,810억 유로를 지원받는 등 ECB의 유동성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.
  - S&P는 2012년 8월 3일 이탈리아 15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였으며, Moody's도 2012년 5월 14일 26개 이탈리아 은행의 신용등급을 1~4단계 강등한 데 이어, 7월 16일 13개 이탈리아 은행의 신용등급을 1~2단계 강등한 바 있음.
-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나,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
  - 이탈리아는 1997~98년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1999년 유로화 도입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감소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.

- 무역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적자 등으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720억 달러(GDP의 -3.5%)와 719억 달러(-3.3%)수준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함.

□ 유럽 경제권에 편중된 무역구조 형성

- 이탈리아는 유럽 경제권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EU 회원국의 경제 상황 변화에 민감한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. 2011년 기준 EU 27개국이 이탈리아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.0%,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.3%인 것으로 나타남.
- 주요 수출대상국('11년): 독일(13.3%), 프랑스(11.8%), 미국(5.9%), 스페인(5.4%), 스위스(5.4%)
- 주요 수입대상국('11년): 독일(16.5%), 프랑스(8.9%), 중국(7.7%), 네덜란드(5.5%), 스페인(4.7%)

나. 성장 잠재력

□ 만성적인 장기 저성장 구조가 경기회복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작용

- 2002~11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0.3%로서 EU 평균 1.3%, 프랑스 1.1%, 스페인 1.8%에 비해 낮음.
-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, 중소기업 위주의 기업 구조 등이 원인으로 지적됨.
- 2011년 3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등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경기가 급격히 하강하고 있는 추세임.
- 경제성장률: 1.8%(2010) → 0.5%(2011) → -2.0%(2012 예상)

□ 기업경영여건 평가순위 중하위권 유지

- 국제금융공사(IFC)가 발표하는 기업경영여건평가(Doing Business Rating)에서 이탈리아는 2011년 83/183위, 2012년 87/183위로 평가되어 기업경

영여건이 중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.

- 분야별로는 세금 납부, 계약 실행 등의 평가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.

## 다. 정책성과

### □ 이탈리아 정부, 강력한 재정긴축안 도입

- 이탈리아 정부는 2011년 11월 몬티 총리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왔으며, 2012년 7월 5일에는 2012년 중반부터 2014년 말까지 공공지출을 총 260억 유로 감축하기로 합의함. 이로 인해 경제성장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2012~13년 중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재정 긴축 → 경기 위축 → 세수 감소 → 추가 지출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발생 가능성 존재

### □ 이탈리아 정부, 성장 회복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추진

- 2012년 6월 27일 이탈리아 의회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을 의결함.
- 노동시장 개혁안은 고용주의 노동자 해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청년층에 대한 인턴 후 정규직 채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.
- 2012년 7월 중순에는 서비스업, 특히 전문직에 대한 시장개방 강화 등의 법안을 통과시킴.

## III. 정치·사회동향

### 1. 정치안정

#### □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2011년 11월 초 사임, 마리오 몬티 총리 거국내각 구성

- 2008년 4월 총선에서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중도우파연합이 상원 315석 중 174석, 하원 630석 중 344석 등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함.

- 중도우파연합은 베를루스코니의 자유국민당(PDL)을 중심으로 지역주의 정당인 북부연맹(LN)과 자치운동(MPA)이 연합해 탄생함.
- 민주당 주도의 중도좌파연정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세금인상 실시 등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반발을 일으켜 총선에서 패배한 것으로 분석됨.
- o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2011년 11월 초 재정위기 악화로 인해 사임하고, 마리오 몬티 총리가 거국내각을 구성함.

□ **경제침체 및 긴축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**

- o 몬티 총리는 강력한 재정긴축 및 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함.
- 여론조사기관인 SWG의 조사 결과, 몬티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2011년 11월 71%에서 2012년 5월 38%로 하락하였음.
- o 2012년 5월 6~7일 치러진 이탈리아 지방선거에서 의회 내 최대 정당인 중도우파 자유국민당(PDL)은 주요 도시 시장 선거에서 결선 진출 후보를 한 명도 내지 못함. 또한 중도좌파 정당이 약진하면서 향후 몬티 총리의 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.

□ **내년 총선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**

- o 경기둔화에 따라 현 몬티 총리의 개혁 조치가 대중적 인기를 잃을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됨.
- 차기 총선(2013년 4월 예정)에서 현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긴축 반대세력이 집권할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음.
- o 2011년 11월 총리직에서 사임한 이후 총리직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베를루스코니가 소속 정당인 자유국민당의 대표로 차기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음.

**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**

□ **건축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빈발**

- 이탈리아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중인 건축정책 및 노동 개혁안에 반발해 반정부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불안정이 초래됨.
- 2012년 12월 12일 이탈리아 노동계는 정부의 재정건축안에 항의하는 총 파업을 실시하였으며, 12월 19일에는 공공부문 노조가 재정건축 반대 시위를 벌임.

□ **중앙정부와 지방정부,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갈등 상존**

- 시칠리아 등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재정부실이 심화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구역을 110개에서 43개로 통폐합할 예정임.
- 2012년 7월 24일에는 지방도시 시장들이 중앙정부의 지역보조금 삭감 등 건축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임.
- 이탈리아 북부지역은 공업화 등으로 발전되어 있는 데 반해, 남부지역은 농업중심적이며 낮은 소득수준,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복지의존도가 높음.

□ **실업률 상승으로 사회불안 초래**

-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1998년 11.3%에서 2007년에는 6.1%까지 하락하였으나 2008년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하여 2011년에는 8.4%를 기록함. 특히 2012년 5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36.2%를 기록함.

실업률: 6.1%(2007년) → 6.8%(2008년) → 7.8%(2009년) → 8.4%(2010년)  
 → 8.4%(2011년) → 10.1%(2012. 5월)

**3. 국제관계**

□ **EU 회원국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에 역점을 두는 대외정책 표방**

- 이탈리아 정부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일 등 EU 회원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로존의 결속을 다지고 시장

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.

#### □ 미국과의 양호한 외교관계 유지

- 이탈리아는 NATO 회원국으로 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지군 파병, 이란의 핵 보유 반대 등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고 있음.

## IV. 국제신인도

### 1. 외채상환태도

#### □ 몬티 총리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 시사

- 2012년 7월 10일 이탈리아 몬티 총리가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동요함.
  - 이탈리아는 2011년 기준 유로존 전체 GDP의 16.8%를 차지하는 제3의 경제대국으로서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요청할 경우 그 규모와 파급효과는 유로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.
  - 이탈리아 정부채무에 대한 2011년 중 이자지급액은 GDP의 4.6%에 이르렀으며, 2012년 7월말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정부채무가 1,830억 유로에 달하여 국채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급증 및 정부채무 축소의 지연이 예상됨.

### 2. 국제시장평가

#### □ 주요 신용평가기관, 금년 들어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

- S&P는 2012년 1월 13일 외부 자금조달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이탈리아 국채신용등급을 A에서 BBB+로 강등함.
- 무디스는 금년 7월 12일 국채금리 상승 등을 이유로 이탈리아의 국채신용등급을 A3에서 Baa2로 강등하고 등급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



- 피치는 금년 1월 이탈리아의 국제신용등급을 A+에서 A-로 하향 조정한 이후 7월 19일 이탈리아의 국제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기존의 A-와 부정적으로 유지함.

**<표 1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**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수출입은행	B2 (2012.8.)	-
OECD <sup>주)</sup>	0등급 (2012.1.)	0등급 (2011.1.)
S&P	BBB+ (2012.1.)	A (2011.9.)
Moody's	Baa2 (2012.7.)	A3 (2012.2.)
Fitch	A- (2012.7.)	A- (2012.1.)

주) OECD는 OECD 회원국 및 유로존 가입국이면서 세계은행 분류 고속득국에 대해서는 평가를 생략하고 0등급을 부여함.

**□ 재정위기 발발 이후 이탈리아 국채수익률 급등 지속**

- 2010년 10월까지 4% 내외를 기록하던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2011년 이후 5% 대로 상승하였으며 2011년 8월 초에는 6.13%를 기록함. 2011년 하반기 유럽 재정위기가 확대되면서 국채수익률은 2011년 11월 말 7.26%로 최고치를 기록함.
- ECB가 유럽 은행들에 두 차례에 걸쳐 1조 유로에 달하는 장기저리대출(LTRO)을 지원하면서 2012년 3월 초 국채수익률이 4.81%까지 하락하였으나 7월 24일 6.60%를 기록하는 등 2012년 7월 말 이후 6% 내외 수준을 형성하고 있음.

**□ 주요 ECA 인수태도**

- US Eximbank : 최고 부보율 적용
- 영국 ECGD : 최고 부보율 적용
- 독일 Hermes : 단기 전액인수 가능

**3. 우리나라와의 관계**

**□ 국교수립: 1956년 11월 24일 (북한과는 2000년 1월 4일 수교)**

- 양국간 수교 역사는 긴 편이며, 문화, 과학기술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

관계가 구축되어 있음.

- 한국-이탈리아 주요 협정체결 현황:

무역, 문화협정(이상 '65년), 사증면제협정('75년), 경제협력협정('82년), 과학기술협력협정('84년), 이중과세방지, 투자보장협정(이상 '89년), 관광협력,사회보장협정('00년), 면허상호인정교환각서('02년)

□ 2010년 이후 대 이탈리아 교역규모 소폭 증가

-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대 이탈리아 교역규모는 전년(77억 달러) 대비 18% 감소한 6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, 2010년 73억 달러, 2011년 85억 달러로 증가하였음.
-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의 28위 수출상대국이며 26위 수입상대국(2011년 기준)
- 우리나라의 대 이탈리아 수출실적: 28억 달러(2009)→36억 달러(2010)→41억 달러(2011)

□ 대 이탈리아 직접투자 실적(2012년 3월 기준): 76건, 4억 달러(누계 기준)

- 우리나라의 대 이탈리아 연중 직접투자 실적은 2008년 6,03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0년 355만 달러로 급감하였다가 2011년 510만 달러로 증가하였음.
- 우리나라의 대 이탈리아 직접투자 주요 업종: 도매 및 소매업(2.8억 달러), 제조업(1.1억 달러, 자동차 및 트레일러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등)

<표 2> 한-이탈리아 교역 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	2009	2010	2011	주요품목
수 출	2,797	3,569	4,107	선박 해양구조물 및 부품, 자동차, 철강관
수 입	3,513	3,723	4,374	가방, 의류, 농약 및 의약품, 원동기 및 펌프
합 계	6,310	7,292	8,481	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## V. 종합 의견

- 이탈리아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, 중소기업 위주의 기업 구조 등으로 2002~11년 평균 0.3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만성적인 장기 저성장 구조를 형성함. 또한 이탈리아 정부채무는 GDP 대비 120% 수준으로 EU 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.
- 이탈리아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중인 긴축정책 및 노동 개혁안에 반발해 반정부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불안정이 초래됨. 시칠리아 등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재정부실이 심화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.
- 유럽 재정위기 발발 이후 이탈리아 국채수익률이 급등하였으며 2011년 하반기 유럽 재정위기가 확대되면서 2011년 11월 말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7%를 상회한 바 있음. 두 차례에 걸친 ECB의 LTRO 지원 등으로 2012년 3월 초 국채수익률이 4.8%까지 하락하였으나 2012년 7월 이후 6% 내외 수준을 형성하고 있음.

선임조사역 김찬수 (☎02-3779-5703)

E-mail: [avik@koreaexim.go.kr](mailto:avik@koreaexim.go.kr)